

광주·전남의회 '행정통합' 가결…이젠 국회의 시간

의견 수렴 절차,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결 '패스트트랙' 통과
선언 34일 만에 법 절차 완료…국회 특별법 '재정 특례 보완' 과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결로 마무리됐다. <관련기사 3·5면>

양 시·도가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라는 패스 트트랙을 선택해 1차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전남 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광주시의회는 4일 열린 제 341회 임시회 본회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재석의원 22명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용임(비례) 의원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떠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남도의회도 같은날 오전 제 3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남도와 광주시 통합에 대한 전남도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제석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양 시도지사가 지난 1월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전격 행정통합을 선언한지 34일만에 법적절차를 완료했다.

지방자치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구역 변경 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돼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의견청취 요건이 달성되자 "시도민과 행정을 믿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의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국회,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준만큼 광주시장으로서 피와땀, 눈물로 통합을 완성해 나가겠다"며 "책임 있게 통합 과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통합을 걱정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

의 목소리 또한 소중하게 듣고 있다"며 "통합은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보완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것인 만큼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 의결 과정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행기겠다"며 "국회 특별법 제정과 통합 준비위원회 구성, 그 이후까지 시민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제안 설명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이유와 목적은 명확하다"며 "산업을 일으켜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이 머무르고 인구가 증가하는 균형발전과 번영의 선순환을 만드는 행정통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통합으로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되거나 불이익 받는 곳 없이, 22개 시군 모두 성장의 결실을 맺는, 상생의 대통합을 이뤄내겠다"며 "전남과 광주가 하나 돼, 첨단산업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대부흥시대를 전남도의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통합에 동의하면서도 양 시·도 주도로 진행된 통합 과정에 불편함을 나타내면서, 추후 양 시·도의회 요구사항의 특별법 반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양 시도는 민주당 검토 과정에서 삭제됐거나 누락된 조항의 보완을 위해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6월 지방선거 때 '5·18 원포인트 개헌' 공감대 확산

개헌국민추진위 국회서 결의대회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와 오월 단체 등이 6·3지방선거와 연계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광주시와 전남도, 5·18 단체, 시민사회, 종교계가 총망라된 '5·18 헌법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가 주도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 오월 공법 3단체장 등 추진위

상임대표단을 비롯해 전국 231개 참여 단체 활동들이 참석한다.

행사는 5·18 정신 헌법 수록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리는 기조발언과 각계 대표의 지지연설, 특별 강연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 개헌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지방 선거 연계 조항 발의,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 등 '3대 선결 과제'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추진위는 국회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5·18 헌법 수록 논의를 전국적인 의제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최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민국 쇼트트랙 '금빛 약속'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둔 4일(현지시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한국 쇼트트랙 최민정과 황대현 등 선수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민, 심뇌혈관질환 원인 혈압·혈당 인지를 '낙제점'

각종 암 이어 사망원인 2위 질환
인지를 혈압 54.8%·혈당 20.8%
시, 올해 23억 투입 예방관리 총력

광주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혈압과 혈당 수치를 아는 시민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당뇨는 광주시민의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선두 질환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분석 결과 광주 지역 주요 사망 원인 중 심장질환(인구 10만명당 22.3명), 노혈관질환(17.3명), 고혈압성질환(4.2명) 등 순환계통 질환이 2위를 차지했다. 사망원인 1위는 각종 암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고혈압 진료 환자는 27만8025명으로 전년(26만9415명) 대비 8610명 늘었다.

같은 기간 당뇨병 환자는 12만1782명에서 13

만4명으로, 이상지질혈증(고지혈) 환자는 29만 3712명에서 31만5875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환자 수가 늘면서 진료비 부담도 커져, 지난해 고혈압 진료비는 126억원, 당뇨병 진료비는 11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질환 예방의 첫걸음인 '자기 혈관 수자 알기' 수준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밟고 있다.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광주 시민의 혈압 수치 인지율은 54.8%로 전국 평균(62.8%)보다 8%p 낮았다. 혈당 수치 인지율 역시 20.8%에 그쳐 전국 평균(30.1%)에 크게 못 미쳤다.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인지율(50.2%) 또한 전국 평균(51.5%)보다 낮았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올해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해 '2026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9월 첫째 주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으로 정하고 협동 캠페인을 펼친다. 한편, 고혈압·당뇨병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등록 관리 사업을 강화한다.

합병증 예방을 위해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당화혈색소 검사비(연 1회 6000원)와 안과·신장 질환 등 합병증 검사비(연 1회 2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광산구에서는 민관 협력 특화 사업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운영한다. 이 곳에 등록한 30세 이상 환자에게는 진료비(월 1500원)와 약제비(2000원)를 지원한다.

전남대학교병원에 지정된 '광주·전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도 지원해 중증·응급 환자를 위한 24시간 전문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급성기 환자의 퇴원 후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돋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 학교
www.kwangshin.ac.kr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

